

## 李 “채상병 특검 수용·가족 의혹 정리해달라”

윤 “의료 개혁·의대 증원 불가피”... 이 “민주당도 적극 협력”  
이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검토를”... 윤 “민생 현안 가장 중요”

###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130분간 영수회담을 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직접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尹대통령-이재명, 앞으로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대화의 창’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양자 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 대통령실 회담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한 뒤 열흘 만에 성사됐다. 차담 형식의 회담은 당초 1시간 가량 예정했지만,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길어져 약 2시간 10분 만인 오후 4시 14분에 종료됐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첫 회담에서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그 외 대부분 현안들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을 보인 것을 전제했다. 회담에 배석한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종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준 만큼 앞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가 더해져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분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도훈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으로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이 옳다”며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 있고, 또 여당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담도 할 수 있어서 어떤 형식이든 계속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민생(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제가 대표님께 오늘 영수회담에 대해 어떠셨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농가서 만든 농산품, 직거래 매장서 팔 길 열린다

#### 규제심판부, 제도 개선 권고

농가에서 만든 농산 가공품을 농산물직거래 매장에서 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농가가 직접 수확한 농산물로 가공품을 만들어 지역 내 직거래 매장에서 팔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농가의 농산 가공품 판매는 대부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하 즉판업) 신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즉판업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 영업하려면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규제가 적용되고, 시설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즉판업은 농산 가공품 제조 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배송만 할 수 있다. 도·소매점에서의 유통·판매는 금지된 탓에 매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규제심판부는 즉판업을 신고한 농가가 만든 농산 가공품을 앞으로는 관할 기초 지자체에 있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식약처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광주 동구-나주시 요양원 관할 '핑퐁 게임' ▶6면

팔도 건축기행 - 인천우체국 ▶18면

타이거즈 전망대 - 홀 6연전 승수 쌓기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바이탈뷰티

신체 본연의 생기와 활력을 되살려주는 홍삼의 명작

## 명작수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및 판매원 : (주)아모레퍼시픽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